

# ‘5·18, 6·10’ 포함, 촛불혁명은 제외… 국민발안제 신설

## 개헌안 전문·기본권 사항 공개

기본·국민주권 강화 조항 확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내용 담아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사항이 20일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사항들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조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관심이 모아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정부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정부 개헌안을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전문·기본권 사항, 지방분권·국민주권 사항,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권한 사항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는 우선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촛불혁명’ 포함 여부도 논의됐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헌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 개헌안에는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임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개헌안에 담겼다.

그동안 노동법 학계에서 문제제기됐던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으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혼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의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기본권은 신설됐다.

생명권과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전명하는 한편, 기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관리 측면에서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성별·장애 등에 대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 변경·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 신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민주주의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리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 사법부 독립·공정성 싸고 여야 격돌

### 더불어민주당

“판단 뒤집어… 멋대로 판결 안돼”

### 자유한국당

“판단 비준증, 법치주의 부정하는 것”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독립해 재판을 수행해야지, 멋대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최근 들어 법원이 적폐로 몰리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 법관에게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시 법원 판단을 비판한 다른 법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의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은 이재용 판결을 두고 널뛰기 재판,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며 “대법원장은 항의 성명을 내는 등 사법부 독립

권 침해를 온몸으로 막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장 인사권 문제를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지적하면서, 대법관 제청권 폐지,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일반 법관 임명권 폐지 등 대법원장의 인사권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의 대법원 체제 속 ‘정치보복’에 초점을 맞췄다.

윤상직 의원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 PC 개봉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보복’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인사 내역을 언급하며 “발탁형·보은형 인사로 점철됐다, 패거리 인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창원 기자

## 안철수, 첫 인재 영입…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본격적인 인재영입 작업을 본격화 했다.

지난 18일 한 달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인재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안 위원장이기에 이번 작업을 통해 지지율 회복과 6·13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 위원장이 첫 번째로 발탁한 인사는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폭로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회를 갖고 “깨끗한 사람이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이

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전 인천 경제 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인천 송도 비리의혹을 제기한 공의신고자 정대유씨가 제 옆에 계시다”고 정 전 단장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의 정 전 단장 영입은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는 안상수(자유한국당), 송영길(더불어 민주당), 유정복(자유한국당) 등 전·현직 인천시장이 연루된 바 있다.

정 전 단장은 “오늘 소위 말해서 안철수 표 인재영입 1호로 서게 되서 영광”이라며 “바른미래당의 결정에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비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영입을 발표하며 함께 클린선거 서약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 韓·日·中 교육부 수장, 교육협력 방안 모색

### 도쿄서 제2회 교육장관회의

한국과 일본, 중국 교육부 수장들이 만나 세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이 올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경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대신과 중국 천바오성 교육부장관 각각 한·일, 한·중 양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양자 간 교육협력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일본 학습지도요령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일본사 탐구 등 교과목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우리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14일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hys@

## 조용필·레드벨벳 등 이달말 ‘평양공연’

### 예술단 160명 4일간 방북·공연 2회

가수 조용필과 윤도현, 정인, 서현, 걸그룹 레드벨벳 등이 포함된 예술단이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연체육관에서 각 1회 공연한다.

남북은 20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공연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병종 기자 joker@

160여 명으로 구성된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과 걸그룹 레드벨벳 등이 포함됐다. 보도문에 따르면,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연체육관에서 각 1회 공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연 날짜는 잠정적으로 4월 1일과 3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종 기자 joker@